

'여성가족부폐지' 관련 YWCA 활동 2차 브리핑

김은경

성평등정책위원회



여성가족부 주요 여성단체장 간담회 안내 및 참석 협조 요청

2022. 10. 20. 14:30-16:00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17층 대회의실

참석 ;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BPW한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6개 단체 대표자 /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여성정책국장 등

주요 내용 ; 정부조직개편안 설명 등 (비공개5)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처음부터 우리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단체 대표들이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간담회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은경 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김현숙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 일부를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이날 낮 2시30분께 열린 간담회에는 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연합회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문직여성한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단체의 각 대표가 참석했다.



김현숙 장관은 간담회 머리발언에서 "여성단체가 우려하시는 부분 등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취지를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일 발표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대표 발의까지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바꿀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은경 위원장은 "장관이 그동안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설명과 다르지 않은, 매우 의례적인 수준의 설명을 (간담회에서) 했다"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이미 국회에 발의된 개편안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 여성 단체 대표들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여당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행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은경 위원장은 "(여가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지난 15일 집회처럼 여가부 폐지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전국 단위의 공동 행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여가부 폐지 반대단체, 김현숙 만났지만..."다 잘 될 것' 말만 반복"

입력2022.10.20. 오후 7:35 수정2022.10.21. 오전 12:39 기사원문

오세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1197?sid=102>

브리핑 배경 및 현안 공유

1. 10월 20일 여가부장관 간담회 개요

- 지난 10월 20일 반대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 6개 참석 단체 모두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반대
- 여가부 장관 ; 여가부의 주변적이었던 업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과 함께 맡아 할 것.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설명(의 자리이며), 남아있는 직제부분 등 많은 과정이 남아있어 할 일이 많다.
- 담당과장 ; 여가부는 조그만 부처로 총괄조정기능은 가졌지만 잘될 거라 확신 없었고, (개편안은) 발전적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 외형틀보다는 (개편 이후)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여, 이 자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었다.
- 한국YWCA 입장 전달 ; 지난 1차 간담회 당시, '스타일리시하고 모던한 부처'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부처를 없애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격하시키는 개편안이 스타일리시하고 모던한 부처인지, 기능과 권한 축소를 기능강화로 주장하는, 앞뒤가 맞지 않다. 독립부처를 유지하면서 기능강화를 요구하는 YWCA 회원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을 해야 한다. 관련부처 협의도 하지 않았다. 장관은 줄곧 부처의 실용과 효율을 강조해왔는데, 여가부의 기능은 효과성과 혁신성의 문제이며, 지난 95년 이후 국제사회 각국의 성평등정책전담기구의 변화, 발전이 이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왔다. 스웨덴 호주 등의 외국사례 언급은 한국사회 심각한 불평등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비교 가능하지 않은 아전인수격의 비논리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폐지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 논의와 여성시민, 더불어 함께 하는 남성들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 등이 계획되어 있다.

2. 현안 및 문제점

- **졸속으로 이루어진 부처 폐지 논의 ; 여성가족부 5개 산하기관 패싱, 논의 없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공공기관들은 여가부 폐지 관련 회의·간담회·연구 등이 있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5곳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 정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 자립),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 정책),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여성 정책),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권익 정책) 등이 있다. 이들 산하 공공기관은 여가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인데도, 부처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다.”
앞서 여가부는 노동부로 이관이 결정된 부처 산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도 관련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이관 소식을 언론에서 접한 새일센터 종사자 사이에서 “현장 의견수렴없이 발표돼 당황스러웠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5784.html>)

- **중앙성별평가위원회 폐지 등 이어지는 지우기 시도**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30일 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법률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법률안’에 ‘중앙성별평가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라고 적혀 있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대상 과제 선정부터 이행 점검과 정책 개선 점검,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제도”라며 “안건이 있을 때마다 민간 전문가를 불러 회의를 여는 비상설 체제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 “지금은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할 때가 아니라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할 시기”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여성가족부 폐지, 청소년·가족 사무 보건복지부 이관 등>

■ 권성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525호)

2022.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 청소년·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그 외의 업무는 관련 부처인 법무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이 관할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의 폐지 또는 유지와 관련한 의견²⁾을 정리해 보면, 먼저,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성평등은 여성가족부만이 아닌 전 부처에서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아동, 청소년, 가족 등 업무를 여러 부처가 분담하고 있어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며,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해소와 권력형 성범죄 등에 대처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여론조사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오는 사례³⁾가 있으며, 가족, 아동, 저출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반면, 여성가족부 유지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남성도 수혜를 받고 있고, 성평등·권익 정책 등에서 여성가족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등 순기능적 역할을 해 왔고, 여성가족부를 유지하자는 여론이 높게 나온 조사결과⁴⁾도 있으며, 성평등 정책추진체계 발전방향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3) 2022년 1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항목에 대해 찬성 51.9%, 반대 38.5%의 결과가 나왔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4) 2022년 1월 넥스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항목에 대해 현행 유지 15.9%, 유지하되 개편 44.6%, 완전 폐지 33.9%의 결과가 나왔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고루 수렴할 필요가 있겠으며, 정부에서도 새 정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므로 향후 정부에서 제출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현재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됨5)6).

개정안에 대해 본칙의 내용을 별론으로 하고 부칙 부분을 살펴보면, 법제적 관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 부칙 제4조는 기존에 다른 법령에서 여성가족부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이 의결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그 사무를 승계한 기관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7)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법령에서의 해당 인용 조문을 실제로 개정하지 않고 개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음.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두고 변경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음8).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처, 학계·전문가, 관련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과의 소통 및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인구, 가족, 아동 문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갈등과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여성가족부 주요 조직 및 기능

여성정책국

▶여성정책 기획·종합 및 여성경제활동 촉진 ▶양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등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의 기획·종합 ▶청소년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항 등

가족정책관

▶가족정책 및 한부모 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및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등

권익증진국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종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여성가족부 개편 일지

1998년 2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김대중 정부)
2001년 1월	여성부 신설(김대중 정부)
2004년 3월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노무현 정부)
2005년 3월	여성부에 보건복지부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해 '여성가족부'로 개편(노무현 정부)
2008년 2월	가족 및 보육 정책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해 '여성부'로 개편(이명박 정부)
2010년 1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이관해 '여성가족부'로 개편(이명박 정부)
2022년 10월	여성가족부 폐지 뒤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 계획 발표(윤석열 정부)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2022년 2월)

관련 기사

'尹의 여가부 폐지'에 놀란 외신 "反페미니스트에 선물 주다니"

독일 언론 "한국, 성차별로 주목받는데.."

미국·영국 언론도 "尹, 반페미니스트 덕에 당선"

신은별입력 2022. 10. 13. 16:20수정 2022. 10. 13. 16:24

<https://v.daum.net/v/pQnJIL6hes>

[단독] '닥치고 폐지'한 여가부... 발표 뒤에야 관련 부처 회의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3372.html>

"김현숙 장관, 뉴질랜드 대사 발언 왜곡해 여가부 폐지 합리화"

[국감-여가위] 한준호 민주당 의원 지적 "뉴질랜드 대사, 김 장관 인용 발언 불편해한다고 해"

22.10.25 17:39최종 업데이트 22.10.25 17:40 글: 박정훈(twentyrock)사진: 남소연
(newmoon)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509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여가부에서 여성 꼭 떼야겠다는 정부, 뭐가 문제냐면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서대문 주민의 목소리 1] "차별받는 사람을 지우겠다는 것"

22.11.08 11:20최종 업데이트 22.11.08 11:20손솔(solforyou)



여성과 노동·인권·종교·환경 시민사회단체 692곳이 결성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식이 열린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각 단체 관계자들이 '성평등 전담 부처 강화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6313.html>